

가둠사기처는 이명박

더는 우롱하지 마라

조직노동자가 나설 때다

이명박은 “눈이 많이 올 때는 빗자루로 쓸어 봐야 소용없다. 일단 놔두고 처마 밑에서 생각하는 게 맞다”고 했다. 장관 고시를 연기한 후 촛불이 사그라들면 미국산 소 수입을 밀어붙일 셈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명박은 처마 밑에 가만 있지 않고 검·경찰이라는 더러운 빗자루를 들고 온갖 야비한 탄압을 통해 눈을 쓸어없애려 했다. 온갖 더러운 수단을 동원해 청소년 손의 촛불을 끄려고 발버둥쳤다. “국민과 소통이 부족했다”던 이명박의 ‘소통’ 방법은 바로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팔 다리를 꺾는 거였다.

하지만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회원 투표 결과에서조차 67퍼센트가 ‘MB 탄핵 촛불 집회 주도적 참여’를 지지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다음 선거를 위해 이명박을 한나라당에서 출당시키자’는 목소리가 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민 건강·생명 퍼주기 협상의 진상과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누구도 이명박 정부를 믿지 않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와 국회의사당 구내식당에조차 ‘호주산 쇠고기만 쓰니까 안심하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그래서 고시 연기 후에도 ‘눈’이 그치진커녕 더 많이 쏟아져서

이제 ‘처마 밑’의 이명박을 파문을 기세다. 5월 17일에는 서울에서 6만 명, 전국에서 10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지난 보름간 연 인원 25만 명이 촛불을 밝혔다고 한다.

발버둥

청소년과 청년들이 먼저 커기 시작한 촛불은 주부·직장인·부모·가족 등으로, 서울에서 전국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다. 이명박 취임식 때 축하를 불렀던 가수 김장훈 씨가 5월 17일 촛불 문화제에서 노래한 것도 시사적이다.

물론 이명박 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상무장관 구티에레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단호함과 용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한다”며 이명박을 응원했다.

이들하고만 ‘소통’하는 이명박은 곧 고시를 강행할 듯하다. 미국과 추가 협의를 통해 지엽적인 몇몇 문구를 약간 고쳤지만,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친 총체적 부실 협상이라는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고시와 동시에 한국 사회의 ‘특정위험물질’ 이명박 제거 투쟁의 물결이 온 나라 곳곳에서 쏟아져나와야 한다.

» 3면으로 이어짐

미친 소와 이명박 OUT 투쟁

- 우석균이 고발하는 ‘추가 합의’ 사기극
- 자본주의와 먹거리
- 쓰레기 언론 조종동

3, 6~7면



광우병 전문가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인터뷰

7면

미국 맑스주의자
마이크 데이비스가 말하는
광우병, 조류독감과 자본주의

8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 끝나지 않은 세계경제 위기

4면



“대운하는 경제성도 없다”

- 이상훈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9면



공공부문을 다
팔아먹겠다는 이명박

12면

독도와 일본 제국주의

2면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막아내자

5면

<맞불> 웹사이트를
http://www.counterfire.or.kr 방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촛불집회 나오는 중고생들은 모두 전교조의 사상교육을 받고 나온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대통령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가.”

－ 우익단체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최인식

“어느 날 보니 MBC 마크 중간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더라. 왜 중간이 빨간색인가? 이게 우연인가?”

－ 우익단체 올인코리아 대표 조영환

“촬영된 영상을 보고 저 사람들이 기자와 피디가 아니라 위장한 좌익 선동원임을 확인했다.”

－ 극우익 조갑제

“광우병 괴담은 병 자체보다 공포를 일으켜 우리를 패배시키려는 마귀의 계략”

－ 순복음교회 목사 조용기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밤 늦게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만큼 촛불시위를 중단해야 한다.”

－ 우익단체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이: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진 것 같다. 소도 염연한 생명체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한나라당 김용갑: “너무 기가 차서 하는 소리인데 혹시 ‘소’ 복지 장관이나.”

“이명박 좀 어떻게 해 주세요.”, “허경영이 대통령 됐으면 재미라도 있지.”

－ 허경영 웹사이트의 댓글들

“악귀 세 마리가 청가와에 있어. 미친 소 조중동 민영화 / 미친 소는 살 떨려. 조중동은 나팔수. 민영화는 서민말~살 / 탄핵 탄핵 이명박”

－ ‘곰 세마리’의 노래가사 바꾸기

문: “매일 촛불 들고 광화문에서 쥐 박멸을 외치는데 별 효과가 없네요?”

답: “쥐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서식처를 찾아 제거하고 주 침입 경로를 찾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리만 지른다고 쥐가 퇴치되지는 않습니다.”

－ 세스코 웹사이트의 Q&A 중

이명박의 ‘일본 프렌들리’와 독도 파문

한규한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명시하려 하자 불뚱이 이명박에게 튀었다. “이명박이 쇠고기 검역 주권에 이어 독도까지 팔아먹으려 한다”는 ‘괴담’이 나돌고 있다.

이명박은 지난 4월 한일 정상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로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친일인명사전 명단 발표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친일문제는 공과를 균형있게 봐야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명박의 이런 ‘일본 프렌들리’ 외교가 일본 우익에게 자신감을 준 것이 사실이다. 이미 지난 2월 일본 외무성은 웹사이트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공식 영어문서를 올린 바 있고, 독도 관련 교과서 개정 문제도 2006년부터 추진돼 오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를 못 본 체하더니 거꾸로 “일본을 용서했다”고 했다. 주일대사 권철현은 “대통령으로부터 과거에 속박당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아”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가슴에 묻어두고” 주일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이 문제들을 삭제하기도 했다.

용서

사실, 거의 모든 한국 대통령들이 집권 초기에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지만, 나중에 일본에게 뒷통수를 얻어맞는 패턴을 예외 없이 반복해 왔다.

이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독도 문제와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한국 쪽이 목소리를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일본 지배자들의 패권 전략과 연관돼 있다.

일본 자본주의는 ‘초국적화’해 세계 곳곳에 진출해 있지만, 이를 궁극적으로 보장할 군사력은 평화헌법 체제에 묶여 있다. 특히, 1991년 2차 걸프전의 경험은 일본 지배자들에게 군사력 증강과 해외 파병의 필요성을 깨닫게 했다.

당시 일본은 미국에 막대한 전쟁 비용을 지원했지만,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본은 철저히 배제됐다. 일본 지배자들이 세계에서 한몫 잡기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피와 땀”도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 우익 지배자들은 일본 민중의 반전·평화 여론을 거슬러 일본의 군비

“천황”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이명박

증강과 해외 파병을 합리화하는데 영토 분쟁과 과거사 문제를 이용하려 한다.

역대 한국 정권은 독도 문제와 과거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강경대응 쇼’를 해왔지만 그때뿐이었다. 한국 지배자들과 일본 지배자들의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엮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한미일 동맹 속에 성장해 왔다. 한국은 일본에서 돈과 기계를 들여와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했고, 일본의 투자는 한국 자본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하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 경단련은 “규제 완화, 외국인투

왜 독도가 문제인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의 일방적 독도 영유권 선포는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강제 합병하는 제국주의적 침략 과정의 일부였다. 현재 일본 우익과 지배자들이 독도를 계속 분쟁 지역화하려는 시도

역시 제국주의적 팽창 기도와 맞물려 있다.

반대로 한국민에게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한국민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은 과거, 그리고 현

자 환경 개선 등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환영”했고, 이명박은 그동안 중단됐던 한일FTA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군사 안보 문제에서도 미국은 미일동맹에 한미동맹을 하위파트너로 해서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해 왔다. 한국 지배자들은 여기에 적극 편입해 살길을 도모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 움직임은 더욱 노골화했다. 이명박은 2003년 중단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과 비슷한 상설회의를 재개하려 한다. 이번 일본의 독도 교과서 파문 와중에도 한미일은 워싱턴에 모여 북한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회담을 열었다.

또, 3월 11일 외교부는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한미일 3자 협의를 가동해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문제를 협의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본 제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정면 도전하기는커녕 한미일 동맹 강화로 미국 주도의 침략전쟁에 공조하고 거기서 한몫 단단히 잡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 지배자들의 대응은 빈 수레가 요란한 것이거나 위선적이었을 뿐이다.

재 진행형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를 뜻하며 정당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매진하는 한, 한국민의 반일본제국주의 정서와 커다란 충돌을 빚을 일이 앞으로 많을 것이다.

이명박의 촛불 끄기

고시를 연기하는 꼼수를 부려도 촛불시위가 전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시위의 가장 능동적인 부위인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촛불시위 참가를 막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다그쳤다.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을 통제하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촛불시위 참가 학생 따로 불러 위협, 학생들의 문자메시지 수신 내용 조사, 교내 방송을 통

최미진

해 시위 참가 학생 처벌 협박, 휴교 문자메시지 조사를 핑계로 학교에 형사 투입하기 등이 동원됐다.

심지어 전주의 한 고등학생은 촛불시위 집회신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수업중에 끌려 나가 형사의 조사를 받았다. 17일에는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을 잡기 위해 교육청 직원과 교사 1천여 명을 총동원해 청계광장을 세부 구역까지 나눠 감시했다.

‘중고딩’과 싸우는 비열한 정부는 언론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의 ‘형님’인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은 “방송심의위원회가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검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방통위는 포털사이트의 정부 비판글을 모두 삭제하라는 외압을 넣었고, EBS의 광우병 비판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다. 최시중은 군사 독재 정부에 빌붙어 찬양했던 옛 버릇을 못 버린 것이다.

이명박은 정신을 못 차리고 애초에 5·18기념사에서 촛불시위를 비난하려 했으나 17일에 청계광장에 모인 6만 명의 기세를 보고 차마 그 말만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작 지지를 20퍼센트의 ‘쥐새끼’를 지키느라 광주 묘역에 경찰 1만여 명이 동

원됐고, 물대포와 경호용 헬기, 폭발물 탐지견까지 등장했다. 경찰은 입구를 겹겹이 둘러싸고 참가자들과 차량을 무차별 검문했다.

이명박이 이렇게 탄압을 강화해도 비판의 목소리는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은 탄압을 더욱 강화해 촛불을 끄려할 것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정부의 청소년·언론 통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미친 소 수입을 저지할 때까지 촛불이 꺼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탄압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

청소년 탄압 · 언론 통제를 중단하라

조직 노동계급이 ‘쥐박이’ 박멸에 나서야

»1면에서 이어짐

쥐를 잡고 쥐가 사는 시궁창을 없애지 않으면 쥐는 계속 똥을 싸고 다니며 집안을 어지럽힐 것이다. 이명박도 “모든 변화와 개혁은 어려울 때 해야 한다”며 미친 소 수입뿐 아니라, 온갖 개악을 거의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개악의 종합선물세트인 한미FTA를 비준하려 한다. ‘4대 강재정비’라고 이름만 바꿔서 환경 재앙을 낳을 대운하를 추진하려 한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의료비 인상 등을 낳을 공기업·의료보험 ‘민영화’ 방안도 앞당기고 있다. 내년부터 초중고 학교별 성적을 등급별로 나눠서 공개해 입시지옥을 더 강화하려 한다.

최근 <프레시안>이 폭로한 이명박 정부의 노동 개악 계획도 충격적이다. 사용 기간을 3~4년 늘려서 기업에게 비정규직 착취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저임금을 더 낮춰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유니온샵을 없애서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막고, 무노동 무임금 지키는 기업에게 혜택 주기 등으로 노조 파괴를 돕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세계경제 위기 속에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재벌·강부자들에게 한시바빠 ‘재벌천국’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생각에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서민지옥’을 향한 이명박의 질주는 취임 두 달 만에 저항에 부딪혔다. 미조직된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찬란한 저항의 주역이었다.

조직 노동자와 기존 민중 조직들이 아직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들 미조직 대중은 놀라운 감수성과 자발성으로 로케트처럼 솟아올랐다. 그러나 미

미조직 대중과 조직 노동자가 뭉쳐서 대통령을 쫓아냈던 2003년 볼리비아 투쟁

조직 대중은 투쟁 경험·전통이 부족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무토막처럼 떨어질 위험도 있다.

대통령궁

따라서 이 운동이 지속되고 무엇보다 ‘쥐박이’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투쟁 경험·전통을 갖춘 노동조합의 동참이 중요하다. “국가 골간 산업을 모두 틀어쥐 저력 있는 집단”(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동참 말이다. 이명박의 고시 강행이 낳을지 모를 미조직 대중의 좌절감을 막기 위해서도 조직 노동자 대중이 나서야 한다. 운수노조의 운송 거부가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된 노동 대중의 동참이 자

생성을 해치고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지 모른다며 주저해서는 안 된다.

2003년에 볼리비아에서도 대통령 로사다의 ‘서민지옥’ 정책에 반대해 처음에 거리로 나와 투쟁한 것은 미조직 대중이었다. 이 투쟁이 조직 노동자들의 동참과 파업으로 연결되면서 로사다는 대통령궁에서 헬기를 타고 도망쳐야 했다.

운수노조의 강력한 미친 소 운송 저지와 더불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파업과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미조직 대중과 조직 대중이 뭉쳐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몰아친다면 이명박은 그야말로 독안에 든 쥐가 될 것이다. 결코 이 과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

“추가 협의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명박은 미국과 추가 협의의 지역적인 몇몇 문구를 약간 손보고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맛불>과의 긴급 전화 인터뷰에서 이것을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수입 중단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소위 GATT와 SPS협정에 따른 권한은 이미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이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단만을 따르도록 한 현재 협정 자체가 그 권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대로이죠. 더구나 국민들은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을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한 것이지 그것만이 문제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진회수육’과 곱창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까지 포함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게 돼 있고 검역주권을 전면 포기한 기존의 협정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이 불가능하게 돼 있고, 도축장 승인과 취소 권한도 미국에게 내주었고, 전수검사도 못하게 돼 있는 데 무슨 검역주권입니까?

심지어 이번 추가 서한에서 미 무역대표부 슈워브는 ‘기존 협정이 적절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고 다시 못박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복잡한 국제 협정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 정부가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협상 원천 무효와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이 정부는 기존 협정을 전혀 건드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과 한미FTA, 그리고 노무현 5년의 배신

미친 소 수입은 한미FTA의 선결 조건이다. 한미FTA는 의료·교육·공공 부문의 민영화와 시장 경쟁 강화, 노동자 멋대로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등을 담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종합선물세트’다. 미친 소 협상이 축산업계와 급식업계의 이익을 우리의 생명보다 우선하듯, 한미FTA 협상도 다국적기업과 재벌의 이익을 서민의 삶보다 우선한다.

이명박은 지금 미친 소 수입도 모자라 한미FTA 비준까지 추진하며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 날뛰고 있다. 한미FTA는 한나라당·조중동의 찬양과 도움 속에 노무현 정부 때 체결과 타결에 이르렀고, 노무현은 이명박에게 한미FTA 국회비준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쇠고기 협상을 하겠다고 부시에게 약속한 것도 노무현이었다.

그래도 노무현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다. 반면 자칭 ‘대한민국 CEO’(최고경영자) 이명박은 ‘종업원’(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산 소 수입이 촉발한 거대한 촛불의 힘은 장관 고시를 유보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17대 국회 임기 내 한미FTA 비준도 가로막고 있다.

뒤통수

따라서 이제 우리는 쇠고기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한미FTA 비준도 계속 저지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의 아류인 민주당이 이명박에 맞서서 우리의 요구를 대변할 리는 없다. 노무현 5년의 배신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5년 전 노무현의 당선은 여중생 압사 사건이 낳은 거대한 촛불 저항의 결과이기도 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친미 우익 이회창에 반대해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던 노무현에게 기대를 걸었다.

노무현과 열우당(지금의 민주당)은 2004년 탄핵 반대 촛불 저항에서도 득을 봤다. 한나라당의 탄핵 시도에 분노한 많은 사람들이 총선에서 열우당에게 국회 과반 의석을 몰아주며 개혁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철저한 배신이었다. 노무현과 열우당은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약법 제정, 한미FTA 추진 등에 앞장섰다. 지금 이명박이 추진하고 있는 미친 정책들(학교 ‘자율화’, 의료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도 대부분 노무현이 기반을 닦아 둔 것이다.

이런 배신 때문에 노무현 지지율은 폭락했고 사람들 사이에 냉소가 커졌다. 덕분에 한나라당이 반사이익을 누렸고 이명박 같은 파렴치한이 대통령까지 된 것이다.

간판을 바꿨을 뿐 개혁 사기꾼들의 모임이라는 민주당의 본질은 그대로이다. 소수 특권층과 기업주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다만, 민주당은 서민을 위해 개혁적인 척 사기를 치며 서민층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지금 민주당은 이명박의 위기에서 반사이익만 노릴 뿐, 미친 소를 진정으로 막을 생각이 없다. 민주노동당 등의 지지를 받으면 통과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미친 소 저지 특별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정부·한나라당과 ‘추가 협의를 통한 검역주권 명문화’로 상황을 대중 뭉개고,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기로 거래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사실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한미FTA를 빨리 비준하자”고 틈만 나면 말해 왔다. 거대한 촛불의 눈치를 보느라 이번에는 못해도, 18대 국회에서 또 우리 뒤통수를 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촛불을 든 우리들은 2002년과 2004년에 촛불을 든 사람들을 배신했던 민주당에 기대지 말고 오로지 대중 행동을 더 거대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것에 매진해야 한다. 이것은 이명박에 맞설, 민주당과는 독립적인 좌파적 정치 대안 건설과도 연결돼야 한다.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석유가 폭등

2002년 배럴 당
\$20

2006년 5월 배럴 당
\$70

현재 배럴 당
\$130

지난 몇 주 동안 월스트리트와 시티[영국의 금융 중심가]가 용기를 좀 회복했나 보다. 미국 재무부 장관 행크 폴슨은 최근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 올 3월과 비교하면 시장이 훨씬 안정돼 있다.”

이것은 올 3월 금융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로 중앙은행을 통해 은행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붓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인 덕분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경제평론가 마틴 울프는 최근의 분위기 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올 3월에 그는 매우 비관적이었다.

“이것은 신흥 개발 국가들의 ‘정실 자본주의’ 위기가 아니라 세련되고 적절한 규제 장치를 갖춘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다. … 그렇다. 정부가 경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주에 마틴 울프는 신자유주의자의 오만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렇게 말했다. “시장이 옳다.”

쟁점은 배럴당 1백26달러로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석유 가격이었다.

울프는 석유나 다른 기초 상품들의 가격 폭등에서 금융 투기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 하는 논쟁적인 문제를 회피한다. 그는 사실상 금융 투기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수요와 공급을 조율하는 긍정적 구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모순적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덜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토니 잭슨은 지난주에 기고한 글 ‘투기꾼들이 상품 가격 상승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에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했다.

첻바퀴 돌기

“2006년에 IMF는 투기 활동이 가격 움직임에 반응하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올 3월에 IMF는 신용 경색과 경기 후퇴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 의아해 했다. IMF는 금융 매수[투기]가 중요한 이유라고 결론지었다.”

“투기꾼들은 금융 거품이 꺼질 위험에 직면하자 2000년대 중반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상품들에 투

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대두하자, 상품들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부각됐다. … 그러나 … 문제는 그런 매수 행위가 가격을 더 올리기 때문에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석유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무엇이든, 만약 가격이 계속 올라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배럴당 2백 달러에 이르게 된다면 신용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심각한 전 세계적 불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지 부시는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중에 유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보호를 약속하면서 석유 증산 — 어쩌면 석유 가격을 낮출 수 있을 — 을 요구했던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는 부시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미 일주일 전에 증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요즘에는 가장 타락한 정권조차 미국 정부의 앞잡이로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석유 가격 상승세가 꺾일지라도, 미국과 세계경제는 위기에 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장 클로드 트리

셰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신용 경색이 끝났다고 말하기를 꺼렸다.

은행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아직도 매우 높다. 이것은 은행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주택 가격은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금융 제도의 부실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불황이 얼마나 심각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란 점이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 앨빈 킹은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면서 이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가격 폭등으로 “사람들이 집에 가려는 실질 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이것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잠식하고 공업 생산물을 상당히 줄일 것이다.” 저들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서울환경영화제

5월 22일(목)~28일(수)
CGV 상암

우스레일 주민들의 이야기》는 2003년 펠리핀 마닐라의 남북철도연결사업 당시 한국 기업 대우인터내셔널이 시행한 공사 과정에서 쫓겨난 5만 명의 저소득층 철거민들이 한국 정부에 항변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터전을 잃은 이들의 이야기 〈길〉, 노무현 정부가 강행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다룬 〈새만금의 봄〉도 추천한다. 또 삼성중공업이 저지른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을 다룬 〈지구전(地球戰)〉과 〈2008: 태안, 그리고 생명의 요람 바다〉는 사건의 끔찍함을 떠올리게 하는 기록 영화다.

치료 가능한 질병임에도 빈곤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의 필수약품 문제를 다룬 〈건강을 팝니다〉, 송아지가 쇠고기·핸드백·비누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보여주는 〈쇼핑〉, 미국 낙농업의 속사정을 다룬 〈우유에 대한 불편한 진실〉도 눈길을 끈다.

석유를 둘러싼 기업 탐욕과 기후 변화, 대안 에너지 등을 다루는 영화 〈뼈아픈 진실: 석유의 경제학〉도 진지한 고민을 던질 것이다. 지구 온난화, 사막화와 황사, 물 부족의 심각성을 다룬 영화들도 눈에 띈다.

환경영화제는 반(反)환경 정책의 리더인 조지 부시와 그의 절친한 친구 이명박,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체제와 대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것이다.

최윤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년 국제학술대회

대안세계화 운동의 이념과 전략

일시 : 5월 23일(금) 오후 1시~7시

장소 : 공공운수연맹 5층 대회의실
(27호선 대림역 10번출구)

주최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사 : 패트릭 본드(남아공 크와줄루 나탈 대학교 교수, 반자본주의 활동가), 데이비드 맥널리(캐나다 요크 대학 교수, 반자본주의 활동가), 정성진(맑스주의 경제학자,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일봉(‘다함께’ 운영위원) 등
외대 박준규 교수의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http://iss.gsnu.ac.kr 참고

문의전화: 055-751-5784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환경영화제는 다양한 환경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소개하는 영화로 가득하다.

다큐멘터리 〈가난에 대한 연대 — 사

다 함께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들을 지켜내자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지난 5월 15일 이주노조의 새 지도부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강제 추방됐다.

한국 정부는 4개월 전에는 외국인‘보호소’ 뒤 철망벽을 뚫고 이주노조 지도자 3인을 빼돌려 추방하더니 이번에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외부 진료를 요구하며 단식중이던 사람들을 쫓아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강제 퇴거 집행을 유예하라는 긴급 구제 결정을 내렸지만 법무부는 이에 아랑곳 않고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추방 집행을 중단하라는 긴급 서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런 요구도 모두 묵살했다.

이주노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이명박의 악랄한 의지가 법무부의 단호한 실천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동안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지키려고 사력을 다 해 왔다. 자신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내세울 조직만은 있어야 한다는,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뽑은 지도부를 잇달아 3번이나 빼앗긴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심정은 참담함과 분노로 복잡하다.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이주노동자들 모두를 향하고 있다.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으로 시작된 전국적인 단속은 거의 살인적이다. 경찰뿐 아니라 심지어 국



촛불의 힘은 이주노동자 연대에도 사용돼야 한다

정원까지 단속에 동원하고 있다. 심지어 2003년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검거할당제’를 부활시켜 지역별로 단속 목표치를 정해 ‘인간 사냥’을 하고 있다.

단속이 워낙 심하다 보니 붙잡힌 사람들 중에는 버마 민주화 활동가, 티벳 독립 활동가들도 있다. 이들 중에는 명백히 난민인 이주노동자들도 있어 본국 송환시 정부의 박해 위협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다 해 왔다. 한국 운동 진영도 이 운동에 함께 했고 운동은 더디지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힘겹게

쌌아 온 이 운동을 뿌리째 뽑아내려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 자신의 투지와 저항만으로 이 탄압을 저지하기엔 역부족이다.

강력한 대중적 저항에 부딪힌 이명박 정권은 지금 분풀이 하듯 이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고통받는 집단인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 운동 진영이 앞장서 이주노동자들이 방어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가중될수록 이들은 온갖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돼 공격받을 것이다. 범죄, 질병, 실업의 주범이자 한국인이 두려워 할 복지 혜택과 부를 빼앗아 가는 도둑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의식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 운동 진영은 최근 이명박을 저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해 가고 있다. 이 자신감은 이주노동자 연대 활동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5월 25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는 그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적과 피부색은 달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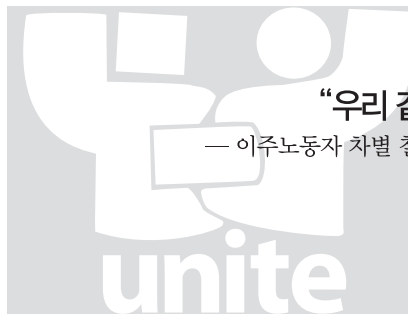
“우리 같은 사람, 같은 권리, 같은 노동자”

—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단속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일시: 5월 25일(일) 오후 2시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주최: 이주공동행동, 이주탄압분쇄비대위



2MB의 민영화가 낳을 재앙의 본보기 암흑에 싸인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은 ‘국가 정전 비상 사태’가 선포됐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정전사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하루에 두 번씩, 한 번에 서너 시간씩 정전되기 일쑤다. 계속되는 정전으로 공장, 사무실, 가정 등은 암흑에 싸이고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아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고통받는 것은 가난한 민중이다. 정전으로 공장과 광산 운영이 중단되면서 벌써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남아공은 전기가 남아돌았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 전기를 수출했고 지금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나미비아 등에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

도대체 지난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남아공 정부는 2000년 3백여 개의 국가기간산업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발표했다. 남아공 전력(ESKOM)에 대한 민영화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전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미 1990년대부터 있었

지만 남아공 정부는 ESKOM을 민영화하려고 ESKOM의 추가 발전소 건설을 불허했다. 대신 사기업에게 발전소 건설을 맡기려 했다.

그러나 사기업들이 낮은 전기료를 이유로 발전소 건설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남아공 정부는 2004년에 서야 ESKOM이 새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발전소는 2014년이 돼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남아공 민중은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추진 정책 덕분에 앞으

로 5~7년 동안 지금 같이 ‘암흑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끔찍한 상황에 직면한 남아공 정부의 대책은 모든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ESKOM은 정전 발생 3개월 전에 전기료를 14퍼센트나 인상한 뒤 곧바로 또 50퍼센트 인상안을 내놓았다.

남아공 전력 대란은 왜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해야 하는지 잘 보여 준다.

최용찬

2007년 10월, 갑작스런 정전으로 약 3천2백 명의 남아공 광부들이 지하 2.2킬로미터의 갱도에 갇혔다 구조됐다

남아공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공격당한 이유

지난주 남아공에서 짐바브웨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해 20여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대피했다.

이주노동자들을 공격한 군중은 이주노동자들이 남아공 사람들의 직업을 빼앗아 가고 범죄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남아공은 심각한 실업과 빈곤 문제를 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주노동자들 때문이 아니라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정부와 기업들이 자행한 시장 만능주의 정책 때문이다.

시장 만능주의

아파트트헤이트[인종차별주의 체제]의 해체 이후 1994년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당선한 ANC는 심각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ANC 정부는 수도와 전력을 민영화했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하락했다.

정부와 기업가들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한정된 상황에서 일부 남아공 사람들은 진정한 적(정부와 기업가들)에 맞서기보다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됐다.

그러나 사태가 꼭 이렇게 전개되리란 법은 없었다. 많은 책임은 사회 문제들을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린 정부와 친기업 언론들에 있다. 특히 정부는 올 1월에 무려 1천5백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체포했다.

사실, 모든 평범한 남아공 사람들이 정부와 기업가들의 이주노동자 공격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미 있는 소수는 정부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해 왔다. 이들은 지금 이주노동자 연대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한발 더 나아가,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인 정부와 기업가들의 시장 만능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누가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는가?

박건희
수의사,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책팀

농심 생쥐강, 동원 칼날참치, 이마트 기성 총 통조림, 야생쥐 냉동채소, 맥도날드 철수 세미 햄버거 ... 불과 한 달여 동안 발생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사건들이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라는 한탄이 저절로 나올 법하다.

이런 사고에 대한 해당 제조판매사들의 태도는 우리의 근심을 더욱 깊게 한다. 생쥐강의 경우, 농심측은 쥐의 사체가 명백함에도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은 후에 야 제품을 회수했다. 이 사고는 별래와 쥐를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조차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다. 제조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발암 물질을 첨가한다든지, 먹어선 안 되는 재료로 식품을 만드는 일도 허다하다.

‘불량 저질 식품’만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조류 독감 확산, GMO 수입 등에서 보듯이, 소위 ‘합법적’으로 생산되는 음식물들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생’으로 먹어도 안전하다며 낫 뜨거운 괴담을 유포하고 있지만, 미국의 ‘완화’된 사료 조처는 광우병의 발생을 필연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 조처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담고 있는 정책(모든 농장 동물에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사료 제공 금지)도 영국에서 이미 1만 6천 마리의 광우병 신규 발생을 낳는 재앙으로 끝난 바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월 정부 조직 개편 때 동물 전염병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인원을 34명이나 줄인 바 있다. 이런 정부에게 방역과 질병의 차단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

도축장에 끌려가는 병든 소 - 이런 소까지 먹으라고?

자본주의에서 여러 형태의 식품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지만, 특히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는 이것을 한층 가속화시켰다. 규제 완화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식품 관련 규제가 1백 건 폐지됐고, 67건의 기준이 완화됐다. 이후 식중독 등 대형 급식 사고 뿐 아니라 쓰레기 만두, 기생충알 김치, 독극물 콜라 등 식품 안전 사건들이 매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윤 논리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조직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는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무자비한 경쟁을 하는 체제다. 각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적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본가들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는 가능한 적은 임금을 주고, 가능한 싸원자재를 사용하는 등 생산 비용을 줄이려

한다. 생산 과정에서 안전·위생 등을 위한 규제는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지나지 않는다.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도 이윤이다. 카길·몬산토 등 거대 곡물 기업들과 타이슨 푸드·콘 아그라 같은 축산 기업들 그리고 네슬레·텔몬트·코카콜라 등의 가공식품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건강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희생시켜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고 있다.

곡물가격 폭등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지만, 카길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석 달간 순수임이 1년 전보다 배가 늘었다. 몬산토 또한 위험 물질인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팔아 같은 기간 배 이상의 이익을 남겼다.

인도에서 농약 성분으로 오염된 콜라를 판 코카콜라, 에콰도르의 바나나 농장에서 8살 어린이들에게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고작 하루에 4천 원도 안 되는 돈을 쥐여 주

는 텔몬트 같은 회사들이 우리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 안전한 식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 축산 기업들이 광우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동물성 사료 생산(렌더링 산업)을 포기하지 못 하는 이유도 이윤 논리 때문이다. 가축의 부산물을 폐기할 경우 추가로 드는 비용과 그 부산물을 사료로 재가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윤의 차이 때문인데, 동물성 사료 가격은 곡물 사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도축업자들에게도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준다.

경쟁은 기업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합법적 ‘로비’와 불법적 ‘뇌물’ 제공을 하게 만들고, “자본가들의 집행위원회”(칼 맑스)인 국가와 정부는 기업들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축산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인체에 해가 없다’는 거짓 말을 10년 동안이나 해댔다. 광우병 파동이 정점에 올랐을 때조차 동물성 사료 생산을 멈추

지배층의 언론은 기업주들과 정부의 편에선 주장을 마치 다수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또 이를 위해 거대한 자금에 바탕을 둔 시장 장악력, 불법 무가치, 경품을 동원한다.

조중동과 달리 개혁적 목소리를 내는 언론들도 있지만, 사장들과 지배층은 이런 언론들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한다.

의식 통제

거대 기업들과 정부는 광고비·협찬금으로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실제 삼성은 지난해 이런 힘을 이용해 《시사저널》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통째로 삭제해 버리기도 했다. 《한겨레》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훌륭한 보도를 소신 있게 해왔다. 그러나 《한겨레》도 며칠 간 보건복지부의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광고를 1면에 실는 모순을 피하지는 못했다.

정부가 최근 ‘PD수첩’을 고소한 것이나 EBS에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 방영 중지를 종용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자들은 노골적 탄압을 통해서도 개혁 언론을 단속한다.

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등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까지 했다. 기업에 이윤을 안겨주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제물로 삼은 것이다.

기업과 국가의 이런 융합은 인적 구성에도 반영된다. 축산·식품 기업 출신들이 행정부 고위 관료로 임명되고, 퇴직 후에 다시 관련 기업으로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다. 미국 농무부 차관보로 광우병 쇠고기 수출에 앞장서고 있는 척 램버트는 15년 동안 미 육우협회에서 활동했고, 통상정책·협상자문위원회 위원인 위스 윌리 역시 미국육우협회 회장 출신이다.

국제기구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발생국가 분류는 5단계에서 갑자기 3단계로 축소됐다. 덕분에 미국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을 수 있었다. 광우병과 관련된 기준을 정하는 OIE 산하 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의 위원장은 바로 미국 농무부 소속 공무원인 알렉스 티에르만이다.

많은 사람들이 로컬 푸드(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 운동이나 슬로 푸드(패스트푸드와 다른 전통적이고 다양한 식생활) 운동 같은 대안을 찾는다. 이것들은 자본주의에 찬증될 수 없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열망의 표출이고,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쓰레기 음식들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다. 특히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공감할 점이 많다.

그러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천천히 직접 요리를 해서 안전하게 먹자’는 것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는 힘들다. 어디서 어느 규모로 생산되든,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값 싸고 질 좋으며 안전한 식품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이윤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우리에게 위험천만한 먹을거리를 강요하는 정부와 기업들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프랑스에서 조제 보베를 비롯한 많은 환경단체들은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해 올해 정부가 GMO 재배 금지 결정을 내리게끔 했다.

궁극적으로는 소수의 기업과 국가 관료들이 갖고 있는 식품에 대한 결정 권한을 평범한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 그래서 식품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윤 논리가 배제될 때 안전한 식품 섭취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맑스는 “물질에 대한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쪽이 정신에 대한 생산수단도 통제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일상적 시기에는 지배계급의 사상이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지배계급의 언론 통제, 의식 통제가 언제나 무너지지 않는 철용성은 아니다. 당장 이번에도, 조중동은 미친 소가 안전하다는 ‘괴담’을 유포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 거짓 말을 믿지 않고 있다.

나아가 투쟁에 나선 사람들은 80년 광주의 민주화 투사들이 만든 《투사회보》처럼 스스로 직접 신문을 만들어 진실과 투쟁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맛발》 역시 운동 속에서 만나는 독자들의 지지금과 보내준 글들을 바탕으로 이 사회의 진실과 운동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조중동과 같은 전박한 주류 언론의 입을 다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거대한 촛불로 더 밝게 진실을 비추는 것이다. 운동이 체제 자체에 도전할 만큼 강력해진다면, 유럽의 68 반란 당시 우익 신문 인쇄노동자들이 신문 발행을 멈춰 버린 것처럼, 우리도 조중동이라는 “찌라시”를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보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 인터뷰

“괴담은 정부가 퍼뜨리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광우병 유발물질인 변형프리온을 지난 10년 동안 직접 실험하고 연구해 온 서울대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만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의 문제점을 물었다. 우희종 교수는 지난 청문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미국산 쇠고기 협정 파기 촉구’ 전국 교수 1천81인 선언에 앞장서는 등 곡학아세하는 친정부 학자들과 정부 관리들에 학자적 양심으로 용기 있게 맞서고 있다.



보였어요. 광우병이 5년 내로 사라진다는 게 정부 괴담 두 번째인데요. 일본 프리온질병연구센터의 요코야마 박사는 광우병 발생 국가 중에 다시 정정국가로 승격된 나라가 아직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5년 내로 없어질 수 있냐고 하더군요. 미국 켄터키 의대 매디컬 센터의 텔링 교수도 광우병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우리가 이 병의 전체 윤곽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사라질 거라는 주장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내왔 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EU의 엄격한 기준을 미국 소에게도 적용하라고 요구하면 정부는 EU 기준은 많이 발병해서 엄격한 거고 미국은 발병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기준을 쓸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병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도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겁니다. 광우병이 많이 퍼진 지역의 소는 몸 속 가득 프리온이 꽂차고 적게 퍼진 지역은 적게 차는 문제가 아닙니다. 광우병에 걸리면 똑같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EU의 엄격한 기준도 미국 소에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측 과학자들이 앞면서도 그런 초라한 변명으로 정부를 두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30여 년 전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찰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집회하면 무조건 용공이다 빨갱이다 이랬거든요.

30년이 지나서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들을 생각도 안하고, 어린 학생들을 배후에 의해 조종당하는 폭두각시로 본다는 것 자체가 우스워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빨기벗은 임금님의 우화가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입은 것 다 알고 있는데 주변 사람이 “최고기 안전해요. 팬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듣고 믿는 게 아닐까요. 빨리 옷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벗고 계시거든요.

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움직임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인터뷰·정리 한수영

조중동 - 특권층을 위한 ‘찌라시’

서병진

“조중동은 쓰레기!”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촛불을 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중동 규탄은 가장 인기 있는 구호 중 하나다.

2MB 이하의 기억력과 말 바꾸기, 거짓말로 일관하는 조중동의 광우병 쇠고기 관련 보도는 그야말로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유전자 분석 결과 미·영국인보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고 대서특필했던 《동아일보》는, 이제 이런 ‘일부 세력’이 벌이는 ‘광우병 공포 세뇌’는 북한의 선전선동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뭘 믿고 고기 먹어야 하나” 하고 노무현 정부의 쇠고기 수입에 핏대 세우던 《조선일보》는 이제 “노 전 대통령은 [광우병 위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다’고 했다”고 노무현을 인용한다. 조중동은

촛불시위는 오로지 사설에서 비난 대상으로만 다루는 반면, 쇠고기 안전 ‘몰입 교육’과 있지도 않은 ‘배후 세력’ 만들기에는 과감하게 1면을 할애하고 있다.

조중동은 다른 술한 쟁점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을 우롱하는 주장을 해 왔다. 〈조선일보〉는 청소년 다 죽이는 O교사와 우열반이 “학교가 경정하도록 유도해 교육을 살린다”고 칭찬했고, 〈중앙일보〉는 초대형 비리를 저지른 삼성 이진희 구속 수사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오물이 묻었다고 죽이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들은 심지어 5·18 광주 항쟁을 학살로 짓밟은 전두환 군부에게 “신중을 거듭한 군의 노고를 잊지 않”(《조선일보》)겠다며 아첨했고, 일제시대에는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동아일보》)며 조선 학도병 강제징집을 거들었다.

조중동은 자신들이 소수 특권층과 권력자들이다. 친일인명사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조중동 창업자이자 전 사주인 방응모, 홍진기, 김성수는 삼성 초대 회장 이병철, 박정희 등 한국의 전통적 지배계급이 그래 왔던 것처럼 철저히 친일·친미로 일관하며 군사독재 속에서 자신들의 배를 불려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조중동은 연 매출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거대 언론 재벌로 성장했다. 이들은 단지 언론 계열사만 거느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LG텔레콤·웨이마트·하나로통신·우리홈쇼핑·데이콤 등 다른 수많은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조중동의 소유주나 실력자들은 다른 재벌, 정치인들과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도 하다. 〈동아일보〉전 사주 김병관은 이진희와 사돈 관계고, 〈중앙일보〉사장 홍석현은 이진희의 처남이다. 현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은 〈동아

조중동의 애독자 2MB

일보》 논설위원 출신이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자 이명박의 ‘형님’인 최시중 역시 〈동아일보〉 편집국 출신이다.

이쯤 되면 권력자, 재벌의 일부인 조중동이 의료·철도·가스·전기 ‘민영화’를 비롯한 각종 ‘재벌친국 서민지옥’ 정책을 찬양하는 속내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중동 등 보수 언론,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마이크 데이비스가 말하는 미국 축산업계의 현실

“누가 미국 정부를 믿겠습니까?”



[편집자 주] 미국에 살고 있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맑스주의자이자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 역사학과 교수인 **마이크 데이비스**를 특별 인터뷰해 미국산 쇠고기와 조류독감의 위험성을 들었다. 국내에 번역된 마이크 데이비스의 저서로는 《조류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슬럼, 지구를 뒤덮다》, 《엘니노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 등이 있다.

최근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거대한 저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을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겠습니까? 미국의 가축 검사제도는 인원이 부족하고 부패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규모의 비육장(肥育場) 생산방식(일개 대형 시설에서 10만 마리의 소와 15만 마리의 돼지를 처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좀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15년 동안 발전한 기업 주도의 ‘가축 혁명’은 재앙이었고, 사회주의자는 세계 식량 안정을 해치고 농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쇠고기 수출을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업화한 가금류·생선류·돼지고기 생산에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지속불가능한

뿐 아니라 동물 재생산의 ‘도시화’를 통해 자꾸 질병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조류독감이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저서 《조류독감》에서 경고했던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의 대재앙이 반복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학살로 당시 불과 몇 달 만에 4천만~1억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게놈 복원 기술을 통해서 그 재앙의 근원이 된 바이러스가 야생 조류에서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H5N1(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 기제를 연구할수록 그것이 많은 수의 인간에게 전염 가능한 형태로 ‘도약’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조류독감이 아직까지는 단지 몇백 명의 생명을 앗

아간 상대적으로 희귀한 질병이지만, 그것은 매우 위협적인 질병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도시 거주자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인구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질병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조류독감》의 개정판을 낸 뒤로, 아프리카 중서부에서는 허술한 감시 체제 덕분에 H5N1이 ‘보이지 않게’ 뛴습니다. 그러나 여러 대륙에서 H5N1이 야생 조류와 가금류의 풍토병이 뛴습니다(즉, 퇴치 불가능하게 뛴습니다). 전염 차단 전략이 실패한 인도네시아에서는 통제 불가능하게 확산됐고, 이제 다카, 콜카타, 라고스, 카이로 근처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일부 아시아 아류형(亞類型)들은 심지어 타미플루(주요한 항바이러스)에 내성을 가지게 뛴고 민간 의약품 회사들의 손에 맡겨 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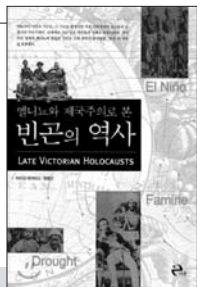
은 백신 개발은 가난한 나라의 슬럼 거주자나 농민들은 고사하고, 부유한 캘리포니아의 거주자들에게도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오직 소수의 부유한 도시들만이 조류독감이 창궐했을 때 인공호흡장치와 위독한 환자들의 급증에 대처할 수 있는 여분의 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윤 체제가 낳은 이런 끔찍한 재앙들이 무엇을 보여 준다고 보십니까?

저는 북반구의 지배자들, 싱크탱크 지식인들, 그리고 중간계급 일부는 이미 인류적 ‘대재앙’ — 질병, 영양실조, 재난으로 수많은 빈민들이 죽는 상황 — 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이미 다른 세계와 거리를 두고 풍요하고 화려한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바이가 가장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들은 사는 동안 지구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소비하겠다는 심보로 살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의 정치학은 이런 종말론적인 정신을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대재앙이 발생할 가능성 앞에서 저들은 한편으로 새로운 항생물질과 항바이러스의 개발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발기 불능’ 치료약 광고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대형 제약회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들은 부자 사회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학적으로 고립된 성들을 건설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고립된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환상 — ‘엘리트 유전자’를 선택해 자신을 재생산하고, 장기이식 등 남의 피를 빨아먹는 방식을 통해 무병장수한다는 환상 — 은 새로운 전염병이 [부자 거주지의] ‘무단 침입 금지’ 표시를 무시하는 순간 끝날 것입니다.



번역자에게서 듣는 《엘니노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 “자본주의가 대재앙의 원인입니다”



정병선 씨는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진보적인 관점의 책들을 많이 번역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저명한 맑스주의자인 마이크 데이비스의 중요한 책 《엘니노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이후출판사)를 번역했다. 이를 계기로 그가 번역한 책에 대해 직접 들어 봤다. 이 밖에 다른 몇 권의 책들에 대해서도 들어 봤지만 지면 관계상 다 실지는 못했다. 인터뷰 전문은 <맛볼>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최근 《엘니노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를 번역·출간하셨는데, 이 책의 원제인 ‘후기 빅

토리아시대 홀로코스트’가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홀로코스트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부의 유대인 대량 학살을 특정하는 용어로 쓰여 왔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죽음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이었죠. 그러나 상업 자본주의 시대로부터 기산해 볼 때 자본주의는 그 발달된 생산력은 물론이고 파괴력을 바탕으로 언제나 홀로코스트, 곧 대량 학살을 자행해 왔습니다.

유럽인의 이른바 신세계 정복이 그랬고, 일본의 난징 대학살, 오르한 파묵이 양심적으로 지적한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 현실의 이라크 전쟁이 그렇습니다. 단연코 양차 세계대전을 빼뜨릴 수 없겠죠.

마이크 데이비스의 이 책은 19세기 후반, 곧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황금 시대라고 일컬어지던 시기에 이후로 제3세계로 전락하게 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이 대량으로 사망하고, 굶주림의 노예로 전락한 과정을 폭로하는 역사서입니다. 그 모든 역사 시대를 통틀어 단일 규모로는 아마 가장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겁니다. 최소 3천만에서 최대 5천만 명의 식민지 빈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니까요.

당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재앙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굶어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엘니노라는 자연 현상에서 기인한 가뭄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원인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였습니다.

이를테면, 1899년부터 1900년 사이에 인도의 베라르 지방에서는 기아로 약 14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어죽는 과정에서 2천17만 톤의 곡물이 이 지역에서 수출됐습니다.

요컨대, 자연 재해가 전혀 ‘자연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마이크 데이비스의 말을 직접 인용해 봅시다. “수백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은 ‘현대 세계 체제’의 외부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및 정

》9면으로 이어짐

한반도 대운하



[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는 최근 국토해양부의 ‘국책사업지원단’을 부활시키는 등 대운하 건설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에 참여해 대운하 계획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상훈 교수를 만나 대운하의 재앙을 들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평가할 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비판하기는 어려운 듯해요. 그래서 저처럼 환경 문제를 따지는 사람들도 ‘경제성은 있는데 환경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대운하는 경제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대운하에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처럼 경제성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운하로 운반할 물류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류량이 얼마 안 된다면 토사를 파는 데 얼마 들고 다리를 고치는 데 얼마가 들고 이런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최근 정부도 경제적 이익의 20퍼센트 정도만 물류 수송으로 얻는 것이고 나머지는 관광이나 지역개발로 이익을 얻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실제로 운하를 통해 운반될 물건은 모래하고 쓰레기밖에 없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양수리에 있는 오래된 중국 음식점 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팔당만 하더라도 겨울에 한 달은 얼어 있다고 합니다. 고여 있는 상태니까 더 잘 얼죠. 그러니 겨울에는 최소한 한 달 이상 배가 다닐 수 없습니다.

제가 홍수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니까 <문화일보>, <조선일보>에서 홍수와 태풍 위험이 있는 동안에는 물을 뺄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빼 놓으면 바지선[밀바닥이 평평한 화물선]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물을 채워두면 홍수 위험이 있고 물을 자주 빼면 배가 다닐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

“환경 파괴도 문제지만 경제성도 없습니다”

니다.<그림1> 그러니 누가 여름에는 비오면 못 가고 겨울에는 얼어서 못 가는 운하로 운송을 하려 하겠습니까?

물론 홍수를 피하고 물을 뺄 필요도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을 아주 높이거나 강바닥을 깊이 파면 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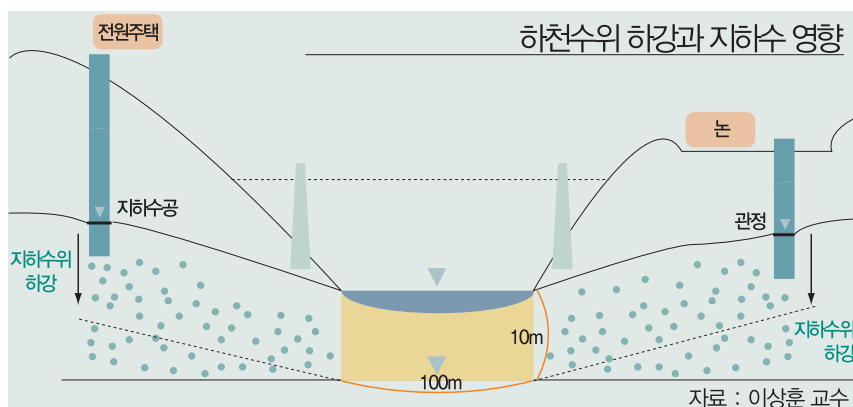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방법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독을 그렇게 높이면 강과 연결된 지류들의 수위도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류에도 높은 독을 쌓아야 합니다. 게다가 한 3미터만 높아져도 지류로 흘러드는 하수는 막힙니다. 더 높아지면 역류합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하수구가 나 있는 집들은 전부 떠나야 할 겁니다.

반대로 바닥을 깊이 파서 수위가 낮아지면 주변의 지하수의 수위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수 취수용으로 파 놓은 구멍에서는 물이 안 나오게 될 겁니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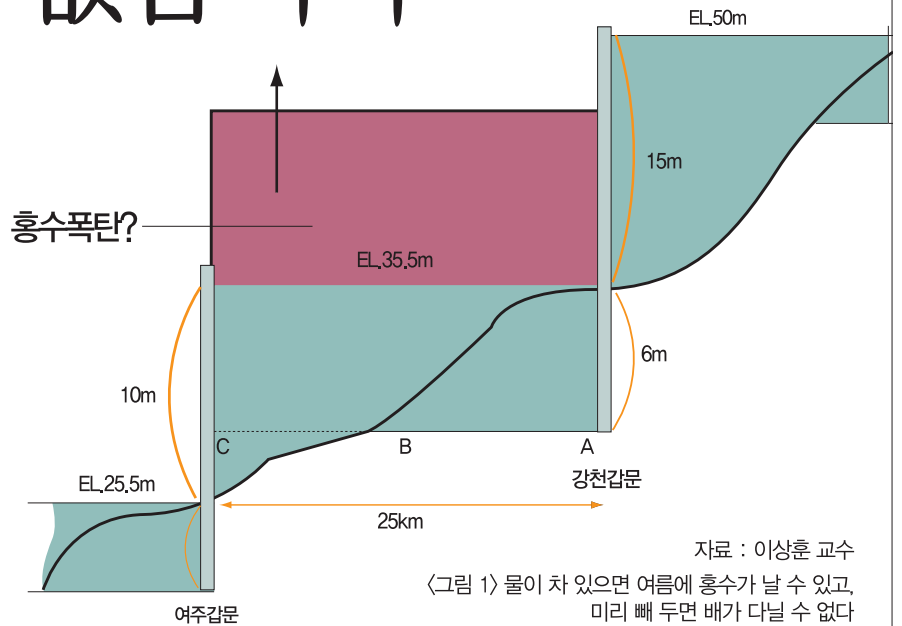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강과 그 주변 환경을 하루아침에 독을 쌓거나 바닥을 파내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

추진 측은 독일 운하를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라인강과 한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강 단면을 놓고 생각하면 1초에 약 1백 톤의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걸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름에 많이 온 물을 담아 뒀다가 흘러보내는 거죠. 만약 이게 없으면 한강의 대부분에서 평상시에 그 깊이



<그림 2> 홍수를 막으려고 독을 높이면 주변 지류 수위도 높아지고, 바닥을 파면 지하수가 말라버린다



자료 : 이상훈 교수
<그림 1> 물이 차 있으면 여름에 홍수가 날 수 있고, 미리 빼 두면 배가 다닐 수 없다

는 50센티미터도 안 될 겁니다. 여름에 물이 많아지고 평소에는 적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잠수교가 잠겼다가도 24시간 안에 다시 마르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라인 강은 같은 시간 동안에 한 강보다 20배나 많은 물이 흘러갑니다. 비가 고르게 오기도 하고 한강과는 달리 강의 길이가 대단히 길고 그 지류가 유럽 곳곳에서 흘러들기 때문에 많은 물이 일정하게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문이 없어도 어느 정도 수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운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 전체를 수많은 저수지가 연결된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운하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투표를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것이지 투표로 하자 말자 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학자들이 모여서 검증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새만금 간척 사업 때도 환경단체가 추천한 학자 10명과 정부 측 10명이 모여서 1년 동안 열심히 연구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서로 전혀 입장이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나오고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놓고 6개월이든 얼마 동안이든 평가를 해 봐야지요. 이것은 세 환경연구소 홍욱희 소장의 의견인데 제가 보기에도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식 논리가 통했습니다. 일단 성장하고 나면 행복해 질 것이다. 그러니 경제 성장을 하자.

그런데 이제는 안 통합니다. 요즘 젊은 이들, 학생들은 ‘왜 지금부터 행복해지는 길을 찾으면 안 될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서로 경쟁하고 맨날 공부만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젊은이들, 서민들의 생각이 더 옳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명박 대통령처럼 ‘4만 불로 가자’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 정리 장호중

>> 8면에서 이어짐

치 구조로 강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에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것이다.”

당시의 재앙과 최근의 식량 위기 문제를 관통하는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영국에서 발행되는 정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008년 3월 1일자 헤드라인은 “식량 가격 폭등으로 수백만 명이 죽게 생겼다”는 외침이었습니다. 마침 그 시점에 이 책이 출간됐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식량 상황은 어떠한가요? 실제로 전 세계의 모든 농장이 현재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8억 명이 만성적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것은 돈과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해당 국가에 식량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UN 식량농업기구(FAO)는 현재의 식량 생산만으로도 2030년의 지구 인구로 추산되는 80억 명을 능히 먹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전자 조작 작물 없이도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시장을 민주적으로 제어하는 노력이 사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민주의자들, 또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제국의 식민지 지배 덕분에 옛 식민지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하는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책의 가장 파괴력 넘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홀로코스트가 자행됐다는 것이 이를 반박하는 증거입니다. 증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운송

수단과 근대적인 곡물 시장이 생명을 구해 주는 좋은 일을 했다는 산뜻한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영국령 인도에서 수백만 명이 철로 옆과 곡물 저장소 앞에서 죽었습니다. 제국의 번영이 무색해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대기근 사태는 빅토리아 시대를 개관하는 거의 모든 역사서에서 실종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참혹한 비밀의 역사를 시급히 돌아봐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이 그런 신화를 박살내는 해독제로 쓰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한규한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청소년 포럼

우리 머리에 구멍을 내려는 2MB 정부 — 미친 소와 한미FTA는 무슨 사이니~?

연사: 박건희(수의사,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책팀)

일시: 5월 31일(토) 오후 3시

장소: 미지센터 청화방(충무로역 4번 출구)

문의: 010-6822-8692

제5회 교사 포럼

1968혁명 40주년 기념 포럼 —

196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연사: 김인식(‘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5월 31일(토) 오후 3시

장소: 책사랑방 (지하철 2호선 신촌역 6번 출구 용악국 건물 5층)

주최: ‘다함께’ 교사 모임 / 문의: 02-2271-2395



지역 사회포럼

강원지역 사회포럼

‘68혁명’ 40주년 — 세계를 뒤흔든 저항과 반란의 해

연사: 김인식(‘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5월 26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춘천 팔호광장 광장서적 2층 북카페

문의: 010-5094-1917

서울 중부사회포럼

광우병 쇠고기 공포, 조류독감 확산, GMO 수입 — 누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 하는가

일시: 6월 4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종로5가 임호빌딩 701호(이화예식장 옆)

문의: 017-224-2157 / 참가비: 2천 원

서울 동부사회포럼

곡물가격 폭등 — 세계는 왜 굶주리는가?

연사: 윤병선(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이윤에 굶주린 자들》역자)

일시: 6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건국대학교 상하관 109호 (지하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도보 15분,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 도보 5분)

문의: 류민희(010-5581-0506), <http://blog.naver.com/atgforum> / 참가비: 2천 원

서울 서부사회포럼

이명박이 가져올 또 다른 재앙 — 의료민영화, 입시지옥화

연사: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진영호(전교조 서울지부 공립중서부 지회장)

일시: 6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연세대 공대 A014호 강의실

문의: 010-5232-1905, 016-785-4957,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북부사회포럼

집중해부 — 학생들을 환자로 만드는 이명박의 환장할 교육정책

연사: 하재근(‘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

일시: 5월 29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권실천시민연대 5층 교육장

(4호선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문의: 010-9191-1917 / 참가비: 2천 원

서울 남부사회포럼

2MB의 미친 정책 파헤치기 — 재앙을 불러올 의료시장화와 교육입시지옥화

연사: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송재혁

(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공립중등관악동작 지회장)

일시: 6월 4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교대(추후 공지)

문의: 010-8181-4800 / 참가비: 2천 원

대학 맑스주의 포럼

북부대학 포럼

미친소 쓰나미와 한미FTA

—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인가?

연사: 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가)

일시: 5월 27일(화) 6시30분

장소: 고려대(추후 공지)

문의: 016-546-5560

성공회대

광우병 쇠고기, 조류독감, GMO —

자본주의와 식품안전

연사: 박건희(수의사,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책팀)

일시: 5월 27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월당관 3406 / 문의: 011-9875-4790

한양대

2MB의 환장할 교육 정책 —

대안은 무엇인가?

연사: 강영만(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집행위원)

일시: 5월 28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사회대 406호 / 문의: 010-6749-7949

단국대

교육, 의료, 물, 철도 —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연사: 김어진(‘다함께’ 노동조합팀 활동가)

일시: 5월 28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인문관 329호

문의: 010-3555-0773

시립대·한국외대·경희대

미친 소 쓰나미와 한미FTA — 2MB에 맞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연사: 박건희(수의사,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책팀)

일시: 5월 29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시립대 정보기술관 112호

문의: 010-6838-1968

부산대

교육, 의료, 물, 철도 —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연사: 최영준(‘다함께’ 노동조합팀 활동가)

일시: 5월 29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부산대(추후 공지)

문의: 010-4569-0501

불편한 진실에 귀 기울이기

어느 조용한 날에 귀 기울여 보세요.

비정규직 정리해고,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

미국의 침략 전쟁, 폭격에 멎어가는 심장 소리들

뜨거운 지구, 가난한 사람들 삶터가 물에 잠기는 소리

물·전기·가스·철도 사유화, 대재앙으로 가는 열차 소리

사람보다 이윤이 우선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건

광우병 쇠고기와 의료보험 민영화,

그리고 무한경쟁의 입시지옥과 비싼 등록금 고지서,

이윤보다 사람이, 경쟁보다 연대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차별이 아니라 존중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다함께’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아래의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조중동 같은 기성 언론들은 진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우리가 흠어진 개인이라면 부당한 권력에 맞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주간지(맛불)을 발간하고,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또한 거리와 대학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대중 행동을 함께하면서,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박에 맞선 저항이 승리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셔서 여러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보세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함께합시다!

‘다함께’는 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과 2000년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국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였던 ‘투장상블’(Tous Ensemble)에서 따온 이름으로, 다양한 운동이 서로 공동행동을 할 필요를 표현한 말입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가판에서도 얼마든지 물어봐 주세요.

웹사이트 : <http://www.alltogether.or.kr>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선 이유

김태희

(미친 소 때려잡기 청소년 거리 행진 기획단,
고등학교 1학년)

제가 촛불문화제에 가게 된 계기는, 광우병이나 '학교자율화'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커지고 있고 거기에 제가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이 생겨서입니다.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우리가 먹는 급식업체에서 그것을 산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는 급식에 의존해서 사는데, 거기에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간다면 급식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야자를 하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을 모두 학교에서 먹습니다. 야자를 하고 곧바로 학원에 가기 때문에 집에 오면 1시가 넘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하고 다음날 학교를 가면, 자는 시간은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가 됩니다. 아침을 먹지 못하는 날이 많고, 학교에서 주는 급식 두 끼를 먹으며 생활하는데 그런 급식에 쇠고기를 넣는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저희가 촛불시위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께서는 저희를 지켜주지도 못하시면서 왜 저희가 스스로 두려워서 저희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을 저지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학교가 있으려면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죽게 생겼는데 단지 학교의 이미지만을 위해서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식을 급식에 넣는 것을 반대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정말 큰 모순입니다.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정책인데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더 크게 봐서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또 국민의 반발을 듣지도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6개월 / 2만 5천 원(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1년 / 5만 원(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www.counterfire.or.kr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이명박 정부는 교과서 우경화 시도를 견어치워라

나는 역사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도 이명박의 개념 잃은 정책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최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우리의 역사 교과서나 역사 교육이 다소 좌향좌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역사·경제 교과서에 트집을 잡았다. 김 장관의 발언은 교사의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배우고 토론하는 것이 교육의 큰 장점이라 배워 왔다. 지금 촛불을 든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교과서에서 배운다며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하게 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나도 그들처럼 “배운 대로 하게 해 달라”고 외치고 싶다.

청계광장으로

정부가 취임 후에 한 일이 무엇인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자들의 입을 빌어 대운하가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는 양 선전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말 한마디 듣지 않고 갑작스레 0교시·우열반 편성을 결

정했고, 조중동 찌라시로 광우병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헛소리를 했다.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더니 이제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국민의 권리가 맘에 안 들었는지 교과서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려 하고 있다.

정부가 교과서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모든 정책에서 더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도록 촛불을 들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청계광장으로 모이길 부탁드립니다.

박태현



인하대

20대 대학생들이 ‘광장’에 나서다

몇몇 언론은 대학생들이 ‘골방’에 있다고 편견을 뒀지만, 5월 19일 인하대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과 미친 소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대회에서는 무려 5천 명의 대학생들이 촛불을 밝혔다.

촛불대회는 등록금 동결을 위한 1부 집회와 미친소 수입 반대 2부 집회로 진행됐는데, 총학생회는 지난 2주 동안 학내 곳곳을 누비며 1만 7천 명 중 9천8백 명에게 촛불대회 참가 선언을 받았다.

인하대 당국은 올해 등록금을 9.5퍼센트 인상했고 총학생회는 올해 초부터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며 5개월째 싸우고 있다. 총학생회는 총장실을 점거한 채 투쟁하고 있다.

이날 많은 학생들이 모이자 압력을 받은 총장은 등록금 인상률을 6.2퍼센트로 낮추고 대학 당국이 학자금 이자를 4회 대납하던 것을 8회로 늘리고, 가계 곤란 장학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양보안을 내놔다.

2부 미친 소 수입 반대 집회에 특별 초대

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 정치인들이 그제야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세기 흑사병인 광우병을 우리 힘으로 막아내자. 대재앙을 몰고 올 대운하에 쏟아 부은 돈 있으면 등록금을 낮춰라” 하고 연설해 큰 환호성과 박수를 받았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버스를 대절해 참가하기도 했다. 6월 3일에 인천 지역 대학생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생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김덕엽

“위험한 지하철, 너나 타라 오세훈”

5월 16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시민안전·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자 시민 한마당’에는 서울지하철·서울도시철도 조합원들과 가족 등 1천5백여 명이 모였다.

김영후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렇게 외쳤다. “위험한 지하철, 너나 타라 오세훈!”

시민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서울시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에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난 4월 14일 정원의 절반가량인 3천3백57명을 전보배치하고, 이 중 8백40명을 사실상 퇴출시키

려고 부당발령 했다. 서울메트로도 5월 2일 3천8백 명을 대규모 인사발령하면서 3백여 명을 강제퇴출 통로인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했다.

이런 식의 인력감축 결과로 무인매표를 운영하고 야간 심야 시간대 역사에 직원을 1명만 배치한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소한 장애도 대형 피해로 키울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서울지하철공사는 또 안전인력 감원과 1인승무제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대구 지하철 참사가 서울에서 재현될 지도 모른다.

그런데 5월 16일 ‘한마당’에서 임성규 공연맹 위원장이 “철밥통”, “노동귀족”이라

공무원 노동자가 미친 ‘머슴’ 이명박을 혼내주자

이명박 정부는 위기에 몰릴수록 공무원 탓만 하고 있다. ‘미친 소 수입’ 정책을 공무원이 제대로 국민에게 ‘홍보’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을 질타하고 공무원 구내식당에 미국 소 요리를 올리라며 공무원을 ‘마루타’ 삼으려 한다.

KBS ‘시사기획 씹’의 여론조사를 보면 공무원의 77.7퍼센트가 정부 정책 때문에 피로감이 높아졌고, 74.7퍼센트가 이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연일 계속되는 ‘미친 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수많은 자유발언자들은 이명박이 하위직 공무원을 향해 쏘았던 ‘머슴론’의 화살을 되려 이명박에게 쏘아대고 있다. ‘머슴

(이명박)이 왜 우리말 안듣냐’는 것이다.

이런 때 하위직 공무원이 반상회에 나가 ‘미국 소는 안전하다’고 홍보하라는 이명박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미친 짓이다. 오히려 공무원 노동자들이 나서서 ‘광우병 소 수입 반대’를 명확히 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 운수노동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의 지지가 폭주할 수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면 공공서비스가 강화돼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 임금 개악 등으로 공공서비스를 더 불안정하게 하려 한다. 안정된 일자리가 없다면 안정된 공공서비스 공급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방공무원 1만 명 구조조정 계획이 담긴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상수도 민영화가 10개에 그친다고 불평하고 있다.

만약 물과 같은 필수재가 민영화되면 요금 인상은 물론이고 안정적 물 공급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공무원의 일자리 지키기는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미친 소 수입 강행’으로 위기에 몰려있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구조조정을 좌초시키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여러 공무원 노동조합이 단결해서 이명박 정부에 맞선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박천석(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다 팔아먹겠다는 이명박의 민영화를 저지하라

이명박의 '민영화(사유화) 광풍'이 시작됐다. 25만 9천 명인 공공기관 노동자를 20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이 확대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민영화는 오히려 민간부문 구조조정의 지렛대가 돼 전체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할 것이다.

물·전기·가스·의료·교육 등의 민영화와 시장화는 공공요금 인상을 낳고 '재벌 천국 서민지옥'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이 민영화를 일사천리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벌써 교사와 공무원·지하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고,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민적 공감대가 관건"이라고 했지만 여론도 이명박편이 아니다.

고작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20퍼센트로 떨어진 지금이야말로 이명박에게 일격을 가할 절호의 기회다. 교사·공무원·병원·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서 민영화를 초반에 박살내야 한다.

모두를 위한 투쟁

민영화 반대 운동은 '광우병 정국'을 활용해야 한다. 미친 소 반대 투쟁에 참여하는 상당수 사람들이 건강보험 민영화와 전기·가스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운송노동자들이 광우병 소 운송 거부를 선언하자 폭발적인 지지가 쇄도한 것처럼, 시민들도 노동조합의 힘이 이명박을 물러서게 할 열쇠임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미친 소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조직적으

로 참가해야 한다. 이윤에 타격을 가하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힘을 발휘해 운동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전교조가 미친 교육 반대 집회를 미친 소 반대 집회와 연결시켰듯이 민영화 반대 투쟁과 광우병 쇠고기 저지 투쟁을 연결시켜야 한다.

한편, 공동투쟁이 중요하지만, 시기를 맞추느라 이미 시작된 공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은 순차적으로 야금야금 공격하려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시작된 선제 공격부터 무력화시켜야 한다. 지금 싸우고 있는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투쟁에서부터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강력한 공동투쟁도 이 같은 투쟁 과정에서 건설될 수 있다.

정부는 완전 민영화, 경영권 민영화, 합병, 자체적인 강력한 구조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영화 효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투쟁 대열이 분산해서는 안 된다. 정부조차 어느 경우라도 대규모 인력 감축 만큼은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구조조정 작업장이 함께 싸워야 한다.

민영화가 전체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는 반(反)공익적인 것인 만큼, 민간부문 노동자들과도 연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앞두고 매각이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투쟁에 금속노조 조선업종 노조들이 공

동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연대하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최근 매각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자격을 상실한 것도 투쟁의 성과일 것이다.

하지만 대우조선 노조가 매각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고용 승계 요구에 그친 것은 아쉽다. 어느 경우든 대규모 감원이나 비정규직 양산을 낳을 수 있으므로 매각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말한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가스를 잠그는 투쟁"을 건설하려면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적극 나서야 한다.

정충남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하라

2006년 12월에 노사관계로드맵을 통과시킬 때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한나라당은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개악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즉,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 행위시 반드시 유지·운영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한 것이다.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규정된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장 전체 업무의 90퍼센트 가량이다. 예컨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도

시철도공사에 쟁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출근 시간에는 운행 수준을 1백 퍼센트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게다가 필수유지업무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가하는 악랄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필수유지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가 쟁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개별 조합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다.

결국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공부문 민영화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 등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손발을 꽂고 묶어 버리려는 것이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에 매달리기 보다는 필수유지업무무제도를 무력화시키

기 위해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힘 있는 파업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고, 파업에 돌입한 해당 노동자들의 단결뿐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로 투쟁이 승리한다면 필수유지업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제3자 개입 금지, 직권중재 등 악랄한 노동악법을 어겨서 깨뜨려 온 자랑스런 전통을 갖고 있다.

병원, 철도, 발전소 등은 정말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필수공익사업장'이다. 이런 필수공익사업장을 시장화·사유화해 기업들의 탐욕에 내맡기려는 미친 이명박에 맞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진정한 '필수유지업무'다.

강철구



맑시즘2008은 저항운동의 토론 광장이자 축제입니다.

50여 개의 강연과 영화 상영·콘서트·사진전·시 낭송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광우병 쇠고기와 한미FTA,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물·전기·가스 민영화 등을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른 세계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장입니다.

맑시즘2008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열띤 토론과 감동의 공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요 연사

조너선 닐 영국학 반자본주의 운동가, 《미국의 베트남 전쟁》(책갈피) 저자 이언 버철 영국의 맑스주의 역사가, 영국 미들섹스대학교 프랑스학 교수

강기갑 민주노동당 재선 국회의원 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김수행 맑스주의 경제학자, 《자본론》(비봉) 번역

정성진 맑스주의 경제학자,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이희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이슬람》(청아) 저자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지부장 강양구 《프레시안》 과학·환경 담당 기자

2008년 8월 14일(목) ~ 17일(일) / 고려대학교

주최_다함께 / 참가문의_02-2271-2395, <http://www.alltogether.or.kr>